



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유럽정상회의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12월 첫째 주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럽연합(27개국)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남.
 - Financial Times는 12월 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여기에 맞춰 유럽중앙은행(ECB)의 대규모 시장 개입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함.
 -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, 프랑스, 영국 등 유럽 핵심 국가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어려울 것이며 '수사적인 합의'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함.

-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향방은 12월 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EU와 유럽 주요국 간 사전 협상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임.
 -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대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.
 - 유럽중앙은행(ECB)은 12월 8일 정책 이사회를 갖고 기준금리 인하, 은행 구제, 유럽재정안정 기금(EFSF)과 국제통화기금(IMF)의 위기 진화를 위한 자금확충, 위험국가 국채 매입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.
 - 또한,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 방안으로 통화동맹을 재정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통합이 사전 협의될 예정임.
 -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5일 회담을 갖고 유로존의 재정 긴축안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기로 함.
 - 재정동맹 논의는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에 완강히 반대해 온 독일 등의 입장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임.

- 12월 4일 이탈리아의 추가 긴축안 발표로 이탈리아 위기 해결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재정위기 해결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높임.

- 그간 이탈리아 위기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재정적자 해결책을 신속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확대되었는데, 이러한 위기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 합의 도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음.
- 12월 4일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세금인상과 예산삭감, 연금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300억 유로 규모의 경제개혁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.
 - 새로운 긴축안에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를 손질해 탈세를 막는 한편 주택세를 시장 가격에 맞게 과표를 현실화해 재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됨.
 - 이번 조치로 이탈리아는 향후 3년간 200억 유로 규모의 긴축과 1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을 통해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■ 또한, 12월 5일 독일과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가 재정적자 기준에 못 미친 국가에 대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재정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임.

- 12월 4일 영국과 프랑스 간 회의에서 재정 긴축을 강제하기 위한 유럽조약 수정 합의가 결렬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된 바 있음.
 -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통합을 위해선 EU 집행위원회, 유럽중앙은행(ECB), 또는 유럽 사법재판소(ECJ)에 개별 회원국 예산 편성 개입과 위반국에 대한 실질적 처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.
- 그러나 12월 5일 독일과 프랑스는 EU 회원국 회의에서 85%의 찬성을 얻으며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EU 안정·성장 협약의 절차를 개정함.
- 현재까지는 회원국의 재정 적자 상한선을 GDP 대비 3% 이내, 정부부채 비율 상한선을 GDP 대비 60% 이내로 각각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음.
 - 지금까지 모두 60차례에 걸쳐 위반사례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은 회원국은 전무함.
 - 독일은 이러한 허점이 유로존에 대한 신뢰 상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였음.

(Wall Street Journal, Financial Times 12/4, 12/5)